

계몽을 통해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육아에 대한 철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일과 가정을 양립해 가는데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보편화되어, 신뢰할 수 있고 이용이 편리한 보육제도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둘째, 자녀는 꼭 필요하며 반드시 출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34%에 불과하다는 결과는, 자녀 출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30대의 경우는 27.5%에 불과하였다. 자녀가 갖는 의미, 가치가 부모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라면 반드시 자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겠으나 자신의 일이나 부부생활, 자아실현 등 개인의 사회적 성취만을 중요시하는 풍조 속에서는 자녀 출산의 더 큰 의미를 찾기 힘들어지게 된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의 당위성과 중요성이 사회적 성취에 견주어 결코 뒤지지 않는 일이 될 때 이러한 의식의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같은 가치관의 전환을 위해서는 교육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와 매스미디어, 각종 사회 교육 프로그램 등에서도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셋째, 미혼 남성에 비해 미혼 여성의 출산의지가 낮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성은 7.7%가 출산의향이 없다고 답했으나 여성은 13.1%여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이유로 개인생활의 향유 이외에 여성의 경우는 '자녀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아서(양육의 어려움)'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정부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을 늘이거나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양육수당 등을 통해 육아의 부담을 덜어 주기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양육이 힘든 일이라는 인식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양육환경 개선과 양육노동에 대한 지원 등 다방면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계속 확대되는 것이 출산을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조사에서 보듯이 30대 미혼 응답자의 32%정도(전체 연령은 28%)가 자녀는 1명만 갖겠다고 응답한 결과를 통해, 현재 관심을 두고 있는 셋째 자녀 출산 장려책보다는 둘째 자녀 출산에 보다 정책적으로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는 셋째자녀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둘째자녀에 대한 지원 폭을 넓혀 자녀 하나를 출산한 가정에서 둘째를 키우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도록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1차 육아선진화 포럼: 저출산 시대의 육아지원정책

이윤진 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육아정책개발센터는 2008년 12월 유아교육정책·보육정책을 사회적 이슈와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영유아 관련 정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영유아관련 학계와 사회단체 30개로 구성된 「선진육아지원 네트워크」를 발족하고, 지난 5월 7일 “저출산 시대 육아지원 정책, 제대로 가고 있는가?” 라는 제1차 육아선진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포럼은 조복희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의 기조발제와 「선진육아지원 네트워크」내 6명의 지정토론이 이연승 한국유아교육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주제발제 및 토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저출산 시대에서의 육아지원정책 기조발제 개요

저출산으로 인해 미래사회체제의 존속이나 유지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우리 사회는 2002년 이후 초저출산 사회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 1.3이하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주 출산연령층이라 할 수 있는 25~34세 여성인구가 향후 급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는 더욱 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의 여러 요인들 중 사회문화적 요인들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 과중한 육아비용 부담을 꼽을 수 있다. 육아부담은 영유아기에 한정된 문제만은 아니다. 부모들 대부분은 자녀가 대학교육까지 이수해서 어엿한 전문직을 가져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이처럼 영유아기부터 20년 이상의 장기간의 양육부담은 자녀를 더 낳는데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의 곤란을 지적할 수 있다. 주 출산연령대(25~3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대폭 낮아지는 M곡선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양육인 것으로 여러 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다.

1) 자세한 원고 내용은 본 센터 세미나 자료(2009-01) 「저출산시대의 육아지원정책, 제대로 가고 있는가?」 자료집 참조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오늘날 한국인들은 결혼 및 자녀출산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상자녀수는 2.3명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인데, 결혼 및 자녀출산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은 향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청신호로 해석될 수 있겠다. 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이 아닌, 현실 속에서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출산 시대의 육아지원정책의 나아갈 방향일 것이다. 이에 ‘이상자녀수 2.3과 출산율 1.19의 간극, 육아정책으로 메우기’를 저출산 시대의 육아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추진방향 및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정책과 병행하는 뉴딜정책**. 기존 저소득층 중심의 복지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역량 있는 중산층을 위한 휴먼뉴딜정책을 통한 정책 선진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자녀양육의 경제적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지만 한 자녀만 있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자녀 더 낳기 정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는 가족·사회·국가의 사회적 연대책임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교과 내에서의 가치교육강화 및 시민교육 실시**. 과거의 출산율 감소는 가족계획 교육의 성과라 볼 수 있고 이것을 경험한 우리사회는 이제 가족과 자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가치관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초·중등학교의 관련교과목의 교육내용에 결혼관, 자녀관, 양성평등관을 다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 가정의 육아지원**.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를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성공적으로 성장시키려면 이들에 관한 체계적인 육아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아동의 57.1%가 만6세 이하이지만 취학 전 아동관련 시책이 통합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각 부처들간의 협력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아동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질 높은 보육·교육시설의 확충**. 현재 자녀양육에서의 고비용구조로 인하여 자녀의 양(자녀수)과 질(인재) 사이에서 집중과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기에 우리나라 부모는 출산을 줄이면서 교육투자를 경쟁적으로 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질의 공교육·공보육만이 고액의 자녀양육비를 줄일 수 있으므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과 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가 만 5세아의 무상교육·보육을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면서 그 대상 연령을 점차 하향화 함으로서 부모의 자녀양육비를 경감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가정지원하기,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신부 지원하기, 맞벌이 가정을 위한 육아지원정책 강화하기 등도 출산장려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하겠다.



2. 지정토론자의 토론 요지

최민수(미래유아교육학회)

기조발제에 원고에서 다룬 내용들을 기본 전제로 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몇 가지 정책을 보완적으로 제안한다. 첫째, 스웨덴, 프랑스, 독일의 사례를 통해 출생부터 만 20세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영유아의 교육·보육의 대상을 모든 계층의 영유아로 확대되어야 하겠다. 셋째, 방과후 초등학생 보육을 활성화 방안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유치원에서도 방과후 보육을 허용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비를 최저생계비 수준의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은 보육·교육시설과 연계될 수 있어야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양질의 직장보육시설 증설, 보육료 자율화의 허용, 시설·설비기준의 강화 및 국가차원의 지원, 영유아교육·보육의 통합시스템 마련, 기관의 탄력적인 운영 등을 제안한다.

이영환(전북대학교 아동학과)

현실적으로 여전히 여성(어머니) 중심으로 부과되어 있는 자녀양육을 아버지가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부모육아휴직제도는 양성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회사경영에도 도움이 되며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강력한 제도로서 자리잡고 있다. 스웨덴의 부모육아휴직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는 80%의 유급 휴가휴직, 12개월의 장기간 휴직기간 보장 등의 실질적인 보상제도를 마련해 두었기 때문이다. 지

금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취업도 지원 중심의 육아지원정책에서 벗어나서, 부모 모두가 취업을 유지하면서 부모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자녀양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권건일(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기조발제 원고 내용 중 설문조사 부분에서 현재 미혼자의 59.6%, 무자녀 기혼자의 54.3%만이 2자녀 갖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볼 때 인구대체수준인 2.1명을 따라잡기란 매우 험겨우며 상당기간 저출산 국가를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본다. 또한 저출산 극복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정책관료자들의 공감대 부족, 보육과 교육의 행정적·법제적 이원화 문제, 재정지원의 안정성 결여, 가임여성의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초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과감하게 통폐합해서 간소화체계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는데, 예컨대 ‘육아지원청’ (가칭)을 신설해서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보호, 교육복지 서비스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시한다.

도미향(한국가족복지학회)

기조발제 원고에서 다룬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향후 저출산 시대의 육아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부가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자녀출산에 대한 ‘가능하면 자녀를 낳는 것이 좋다’라는 의식을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한다’라는 의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치관 재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과중한 육아비용 부담은 결국 가계소득이라는 경제적 요인과 맞물려 있으므로 노동시장과 연결된 가족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저소득층 가정이 아닌 일반가정에게까지 지급하는 보편적인 가족수당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넷째, 좀 더 효과적인 성과달성을 위해서는 보건, 복지, 영유아 지원서비스들 간의 네트워크구축과 통합적인 서비스 센터가 필요하다. 다섯째, 미래세대의 글로벌 인력을 확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다문화 가족에 관한 서비스 확대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또 하나의 대안이다.

정혜손(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기조발제 원고 내용처럼 결혼 및 자녀출산에 대한 우리사회의 긍정적인 인식은 향후 육아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이 수월할 수 있다면 저출산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신호이므로, 다음의 육아지원제도만이라도 제대로 실시된다면 저출

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출생부터 만3세미만의 영아는 부모가 양육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 중 한 명이 월급의 70~80%를 지급하는 유급 육아휴직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둘째, 모든 만3세~만5세 유아대상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하겠다. 셋째, 저출산을 경험한 일부 선진국(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중국, 대만, 홍콩 등)에서는 이원화된 보육·유아교육을 통합하여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로 일원화했다는 사실을 통해, 미래사회의 경쟁력 확보에 대비한 우수한 인적자원양성을 위해서는 행정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김서중(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인구정책과)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 및 소득의 불안정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연기하고 있으며 자녀양육비용의 지속적인 증가 및 일과 가정 양립지원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현실 등으로 향후 저출산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확대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해결이 보이지 않는 주요 원인은 저소득층 위주의 정책적 지원과 출산순위별로 차별화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부는 저출산 시대를 대응하는 노력으로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확대, 입양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0~4세 아동의 무상보육지원 및 차등보육료 대상자의 단계적 확대, 일·가정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실시할 것이며,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전방위적인 대국민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